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숨을 골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자

표류하는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목의 고민

제2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9월 10일로 백일째 접어들었다. 그 사이 노사정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많은 과제들을 내 놓았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그래서 이제는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지 않는가 하는 느낌마저 들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1기때 나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그토록 선포를 대던 김대중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여야는 물론이고 역사적 대타협이라고 칭찬해 마지 않던 언론도 나라 돈만 축내면서 뭐하고 있느냐고 다그치지도 않는다. 전경련과 경총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식으로 관심도 없고 집념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고 했던가. 정부나 자본측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렸던 기본 목표-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도입-를 이미 얻어냈으므로 더 이상 효용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사정위원회를 진지하게 끌고 가면 골치만 아프다. 제1기 때 합의했던 다른 조건들도 그렇고 '해고의 자유'를 허용한 대가로 노동측이 여러 가지 개혁요구를 들고 나오면 부담스러울 뿐이다. 여기에 집권당이나 정부 부처에서 노사정위원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려는 경향도 가세하고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사전협의는 자기 식대로 휘두르고 싶어하는 집권당이나 정부 각 부처로서는 시간만 낭비하는 성가신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부 관리들이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두고 법률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정부의 투정을 잘 말해 준다. 둘러리라도 세우고 싶지만 금융산업과 공기업 구조조정 결정 때 나타난 것 처럼 노동쪽이 거세게 반발하니 이 또한 귀찮을 뿐이다.

이처럼 쓰임새가 다 끝났지만 정부 스스로가 드러내놓고 노사정위원회를 없애버리자는 얘기는 못하고 있다. 기본목표는 달성했지만 아직도 몇가지 쓰임새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는 '국민의 정부'가 외쳐대는 '국민대통합'에 가장 걸맞는 정치의 모양새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절박한 위기에 몰린 노동쪽이 투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수 있는 주요한 장치이기도 하며 이른바 '제2전국선언'이나 '신노사문화 창출'에 어떻게든 활용해야 할 필요가 남아 있다. 더욱이 대통령 자신이 힘들어 만들어 놓았다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낼 수도 있다. 이처럼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바라는 큰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없애 버릴 수도 있지만, 아직은 활용가치가 남아있는데다가 비용도 그다지 들지 않는데 욕을 먹어가면서 없애 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만일 노동쪽이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다고 불만을 품고 스스로 깨고 나가면 노동쪽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사정위원회의 상태에 대해 노조쪽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얻은 것 없이 정부의 둘러리나 서면서 정력만 낭비하고 있으니 당장 뛰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양대 노총은 총력투쟁을 배수진으로 치고 몇 차례 참가와 불참을 거듭하면서 요구를 관철하고자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제2기에 들어

서 협상과 투쟁이라는 원칙이라 수많은 집회와 투차례의 총파업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크게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수많은 노조간부들이 구속되거나 수배당하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심지어는 노사정위원회 위원이 구속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부당노동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정의사업장에 공격력이 투입되기도 하였다. 일단투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조건이

정부는 '신노사문화'의 추진은 노동자는 또 하나의 큰 부담이다. 그것은 MF상환이나 경제위기가 개입이 없는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 빈대처럼 싸울 수인은 없기 때문이다.

크게 깎아 나가는 대신, 고용안정에 모든 힘을 기울였지만 불안상태는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마당에 노사정위원회에 남아 있어야 할 근거는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조쪽은 당연히 노사정위원회를 뺀 채 나와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다. 삼반기 총파업투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싸울 힘이 약하고 또 잘 모

아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적은 힘이라도 죽어라고 싸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자칫하면 소모전이 될 위험성이 크다.

### '신노사문화'가 던지는 또 하나의 부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노조쪽에게 정부는 '신노사문화' 선언에 나서달라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노사문화'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펴낸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라는 책자에서 '신노사문화의 함축'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실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합리적인 고용조정 완화책, 다양한 고용형태의 활성화, 임금제도의 유연화 따위의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구조조정기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실업발생의 최소화, 새로운 일자리 마련,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하며 노사정합의를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여 참여와 협력의 새 노사문화를 확립해 나간다”.

만일 ‘신노사문화’란 것이 이 내용대로라면 김영삼정권의 ‘노사관계 개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둘 다 새 노사관계의 바탕을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실업문제 해결책을 나열하고 있고, 노·사·공익이 논의의 중심인 ‘노사관계개혁’ 대신 노사정 합의를 정책협의의 틀로 내놓았다는 것 정도이다.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 보면 ‘신노사문화’는 노동쪽에 예전보다 더 무거운 짐을 요구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로 한껏 넓혀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정부가 더 세게 밀어부치고 임금제도의 유연화까지 내밀게 되면 노동쪽의 고통은 더욱 심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노사문화’는 노동기본권의 유보까지 요구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신노사문화’는 지난 공복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말한 ‘제2의 건국 선언’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 선언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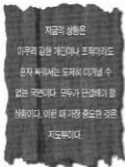
“공정한 여건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양보로 노사간에 대타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99년 말까지 쟁의가 없는 노사협력체제를 성사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물론 ‘쟁의없는 협력체제’는 ‘고통과 성과의 공정한 분담’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통분담이 실제로는 노동자의 고통전담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고통과 성과가 공정하게 나누어지리라는 기대를 갖기가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다. 또 ‘신노사문화 창조’의 사명을 띄고 탄생한 노사정위원회는 방향을 못잡고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기대’에만 기대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신노사문화 창조’를 밀고 간다면 노사정 사이의 충돌과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신노사문화’의 추진은 노동쪽에는 또 하나의 큰 부담이다. 그것은 IMF상황이니 경제위기니 개혁이니 하는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반대하여 싸울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양대진영으로 나뉘어 있는 노조진영의 현실을 정부는 적극 활용하려 할 공산이 높다.

이와 같이 노사정위원회나 '신노사문화'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쪽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노조 안팎



에 이러가지 논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식의 패배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상황에는 항상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노동쪽이 꿰뚫어 활용하면 입장한 소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이라는 목표는

들 사이에 서로 충돌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치의 만능약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노동쪽의 힘이 약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턱대고 밀어 부치기에는 김해기반이 취약한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활용가치를 아직은 버릴 수는 없다. 노동쪽의 치지에서 보면, 정부가 말하는 고분분담의 관점에서 제1기 때 일보한 대가를 요구할 충분한 명분을 지니고 있다. 협의과정에서 정부나 자본쪽의 잘못을 들추어내 노조쪽의 정당함을 알리고 정부 자본쪽의 양보를 확보해 낼 수도 있다. 나아가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노동쪽은 힘을 한데 모아 싸울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협의회는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정책참가의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쪽은 노사정위원회에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쉽게 버려서도 안된다. 대의명분을 분명하게 세우고 고성과 투쟁의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

## 단결 강화와 현장토의의 활성화가 급선무

상반기 내내 치열한 싸움을 하고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노동쪽이 하반기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나름대로 분석한 정세를 바탕으로 투쟁목표와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목표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놓고 있지 않다. 하반기라 해야 석달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각급 조직마다 열심히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으며, 투쟁의 중심인 노동자들 사이에 활발한 현장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중앙조직에서는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팔 따르라고 외쳐 대지만, 정작 투쟁의 주인공들인 현장노동자들은 생활고와 고용불안에 짓눌린 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상식에 속하는 얘기이지만 투쟁은 노동대중의 불만과 분노만 가지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투쟁은 이들을 하나로 모아 통일시키고 노동대중 스스로 투쟁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세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투쟁목표를 분명하고 훌륭하게 세우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 역시 몇 사람의 판단으로만 결정할 경우 힘을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성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더욱이 지금의 상황은 아무리 강한 개인이나 조직이라도 혼자 싸워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국면이다. 모두가 단결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부이다. 지도부가 단결하여 지혜를 모으지 않고는 목표를 올바르게 세울 수 없고 대중은 결코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단위노조, 연맹, 중앙조직이 제 할 일을 찾아 실천에 옮겨야 하며, 각급조직과 현장 대중들이 투쟁 목표를 자기 것으로 여기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상황은 항상 변화하고 그 새로운 변화는 도전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도전에 스스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변화로부터 이익을 챙기려는 쪽에 휩쓸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숨을 고르고 적은 힘이나마 하나로 모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